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이재명 후보의 경제, 노동, 정치, 외교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발행 2021.11.4.

퍼낸곳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

메일 pssp4001@gmail.com

소책자 구입 문의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www.pssp.org

클 싼는 순서 4
대장동 의혹에서 기본소득 공약까지, 총체적 검증을 위하여 8

이재명 후보의 기본정책 시리즈 대해부

01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본적인 건 다 챙겨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공약이 있을까요? 15

02 기본소득은 한국의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17

03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증가해서 자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20

04 탄소세를 걷으면 기후위기 대응도 되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던데요? 22

05 기본주택이 보급되면 100만 가구가 역세권에서 살 수 있고, 그
걸 짓는 데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24

06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주택으로 주택시장
을 안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27

07 부채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국가가 낮은 이자율로 1000만 원씩
빌려준다는데,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30

08 이재명 후보도 자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요? 33

이재명 후보의

노동 친화 정책 대해부

- 01 이번 대선에서 노동조합의 목표는, 노동친화적인 후보가 당선되어 노동운동이 기존에 요구하던 노동정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40
- 02 이재명 후보는 친노동 정치인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120시간 노동 발언 등을 보면 반노동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왜 이재명을 지지하면 안 되나요? 46
- 03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억강부약 정치로 대동세상”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치인이 아닌가요? 54
- 04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59

‘한다면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관 대해부

- 01 왜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는 건가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면 추진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65

큰 심는 순서

- 02**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
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하는’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은 지도자로서의 덕목 아닐까요? 69
- 03**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법치주의자’라고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
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법치주의
가 확립되지 않을까요? 75
- 04** 박근혜 정부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다르
지 않았나요? 80
- 05**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면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는 게 불
가피한 거 아닐까요? 84
- 06** 검찰과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 투표로 뽑은 정치인들
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까지 폐단이 많았으
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1
- 07**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가짜 뉴스’
가 많아서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중재법
을 통해 언론의 문제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96
- 08** 법치나 민주주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노
동조합이 굳이 관심 가져야 하나요? 100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외교정책 대해부

- 01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외정책이 ‘국익중심 균형외교’노선이라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109
- 02 남북관계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방향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11
- 0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을 인정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115
- 04 이재명 후보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말한 만큼, 얼어붙은 남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낼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119
- 05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위해 중국과 가깝게 지내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123
- 06 이재명 후보의 발언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30
- 07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그 동안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비판해 왔는데, 중국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36

소책자를 내며

대장동 의혹에서 기본소득 공약까지,
총체적 검증을 위하여

28대 62로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 10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가 선출된 지 얼마간 시간이 지났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줄곧 앞서 나갔지만, 24만 8천여 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2.37%를 기록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28.3%를 얻는 데 그쳤다. 3차 선거인단 경선은 일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시민이 참여한 경선으로, 10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바로 여기서 이재명 지사

를 찍은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된다는 뜻이었다. 1, 2차 선거인단은 각 후보 캠프가 열성적으로 모은 지지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3차 선거인단은 자기 뜻으로 참가한 사람이 많다는 관측을 고려하면, 일반 여론에 훨씬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은 “대장동 의혹 때문이라면 같이 선거를 치른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역선택이든, 특정 세력의 조직적 참여든” 이재명 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집단이 개입한 결과인 것처럼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경기, 서울 경선에서 각각 59.29%, 51.3%를 득표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해야 마땅하겠지만, 이재명 캠프는 또 무언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들었다.

하지만, 10월 26일 여론조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답이 53.7%, 국민의 힘 책임이 크다는 답이 37.5%로 나왔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찬성 64.0%, 반대 27.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겪은 후 말로는 자기반성을 외쳤다. 송영길 대표는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원, 권리당원이 또다시 우리 사회 시민의 일반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제2의 조국사

태 국면에 진입한 셈이다. 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켜내기 위해, 그의 모든 잘못을 대신 변명해야 하고, 그러다 결국 유권자의 상식적인 판단을 거스르게 되어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다시금 연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친여 성향의 언론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는 보다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는 대장동 사태를 둘러싼 “이런 비판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성실하고 진솔한 소명을 요청한 셈인데, 그는 과연 그러했나?

11월 2일 언론에 알려진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651억 원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 택지분양가를 정상적으로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1400만 원으로 낮추어 성남의뜰이 651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뜻이었다. 나아가 11월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초과이익 삭제가 업무상 배임범죄가 성립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이 핵심 쟁점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 9월 9일에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가,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는 고정이익 확보 지침 때문

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고 전혀 다르게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입을 빌면, “부정 소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선 초과이익이나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이익을 확정한다는 거였다.”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앞뒤가 서로 부딪치는 그의 어록을 일일이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다. 모든 말을 종합해보면, 초과이익 환수 삭제가 정당하다는 얘기와 나는 잘 몰랐다는 얘기가 범벅이 되어 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데, 그에게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도둑이 매를 듣게 하는 이재명 후보

10월 10일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면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11월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연설은 기득권 대 반기득권이라는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차 있으나, 자신에게 쏟아진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그가 어찌 부패기득권과 최후대첩을 이끌고 부동산 대개혁

을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단은 “우리가 배임을 한 것이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배임”이며,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어서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으로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총체적 검증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그의 화려한 언변 속에는 논리적 모순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그의 말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제대로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제시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처럼 그의 정책 공약은 매우 야심차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그의 정책은 매우 영성한 가정에 바탕을 둔 희망사항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경제·노동 정책뿐 아니라, 통일·외교, 정치·민주주의 관련 정책공약도 것처럼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앞으로도 한 축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며, 다른 한 축으로는 그가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검증을 제시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소책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를 기획했다. 그리고 소책자 독자들과 함께 하는 유튜브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 타락을 경험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한국 사회를 또 다른 위기로 이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이재명 후보의
기본정책 시리즈 대해부

01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본적인 건 다 챙겨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공약이 있을까요?

듣기 좋은 말이 도를 넘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걸만 번드르르하게 꾸며서 하는 말이거나,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하더라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구성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기본시리즈가 시행된다면, 모든 국민은 연 1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10억 원 상당의 역세권 30평대 아파트에 월세 60만 원으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은행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저리로 장기간 기본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다 기본소득, 기본대출까지 준다는데 누가 싫어할 수 있을까요. 공약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이 도를 넘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걸만 번드르르하게 꾸며서 하는 말이거나,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하더라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본시리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니다. 국가의 정책은 여러 개가 결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과격적인 정책은 멋져 보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기존에 있는 여러 정책과 잘 어우러지기보다는 그러한 국가정책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할 가능성이 큼니다. 개인이 버는 만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역시도 버는 만큼 쓸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쓸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도, 생활을 위한 주택도, 도전을 위한 대출도 시민의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에서 돈이 있어야 나눠 줄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빼놓고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하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무시한다면 기본금융보다는 기본파산에 가까운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항부터 기본시리즈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2

기본소득은 한국의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전 국민에게 매월 8만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지정책일까요? 60조 원은 질병·실업 등 예상하지 못하는 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023년에 모든 국민에게 연 25만 원, 청년(19~29세)에게 연 125만 원을 지급하고, 서서히 늘려가서 2026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나의 필생의 정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기본소득 자체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내 연 100~200만 원 지급 달성을 제시했고, 자신이 꿈꾸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월 50~6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달성하고 기존에 구축된 복지망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매년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준다면 따져볼 것도 없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청년에게는 2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준



Expert Comment

The Euro sign on the doorstep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in Frankfurt, Germany. (Credit: ilobitz/Bigstockphoto.com)

Universal Basic Income – not really an alternative

Ralf Krämer (2019)

DOC RESEARCH INSTITUTE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소속 연구자가 쓴 보고서,
'기본소득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의 표지

독일노동 내 양대 최대조직인 금속노조와 통합서비스노조는 기본소득에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의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과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거라고도 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미경, 「노동조합의 기본소득론 비판」, 《계간사회진보연대》, 2021년 여름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Krämer, Ralf. "Universal Basic Income-not really an alternative", Dialogue of Civilizations Research Institute, 2019.)

다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갈등도 생길 일이 없습니다. 기업주(자영업자)에게 직원 임금을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업주와 직원에게 돈을 똑같이 주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가 없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개인재산을 털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나눠주는 것이니 말입니다. 국가재정은 곧 국민이 내는 돈(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대통령이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확장재정을 통해서 지출하면 되고,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확장재정을 펼치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갚거나 우리의 자손들이 갚아야 합니다. 게다가 국채를 매입한 금융기관, 기업, 외국 정부에 매년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기본적으로 자본-노동자 간 분배 개선에도 불리합니다.

기본소득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정책입니다.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려면 연 60조 원이 소요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340조 원이 소요됩니다. 최근 제출된 2022년 정부 예산 604조 원의 10~56%나 됩니다. 기본소득은 기존 재정을 활용하는 대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민간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그만큼 민간의 지출·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토지나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국토보유세를 걷고,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를 징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증세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걷어서 다른 곳에 쓰는 대신 기본소득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전 국민에게 매월 8만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지정책일까요. 60조 원은 질병·실업 등 예상하지 못하는 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추가로 다른 복지도 확장재정을 통해 더 많이 하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통장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03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증가해서 재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인데,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황기에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될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자 성장전략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도 성장전략도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더 과감하게 반복하는 것이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의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를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임금 증가로 자본 이윤이 하락하면 이윤을 다시 높이려는 자본의 노력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성장전략이라는 주장도 같은 논리입니다. “공급 바퀴를 키우는 건 소용이 없고 수요 바퀴를 키워야 한다. …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인데,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황기에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될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급 측면은 무의미하고 수요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틀렸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자본의 투자, 노동력의 증가, 기술의 발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인데, 소비 증가가 이러한 요소들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은 정확히 경제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안에는 소비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당장 경기도지사로서 실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만 해도 재정투입에도 못 미치는 효과를 거두었

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적폐”라는 비난으로 일관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기부양 효과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국토보유세 및 탄소세를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로 충당되지 않으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면 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반복되면 우리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점점 더 쌓여갈 것입니다.

04

탄소세를 걷으면 기후위기 대응도 되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던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징수해서 재원을 마련한 다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소비에 모두 사용해버린다면 탄소세 징수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할 여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함께 탄소세를 언급합니다. 그는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부담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

자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므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원을 마련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으로, 탄소세 부과 자체는 기본소득의 목표와 상충합니다.

먼저 탄소세를 걷으면 그만큼 소비자물가가 인상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세는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 부담이 최종적으로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유가가 인상되었을 때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탄소세를 징수한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이 같은 효과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공약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세는 역진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화석 연료에 대한 물품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간접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한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탄소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도 간접세로 도입될 가능성이 큼니다. 예컨대 가게에서도 주택 난방이나 차량 운행을 할 때 화석 연료를 구입하면서 간접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휘발유 1L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역진세입니다.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구상과도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세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탄소세 부과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은 세금부담으로 개인·기업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의 생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이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징수해서 재원을 마련한 다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소비에 모두 사용해보려한다면 탄소세 징수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할 여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05

기본주택이 보급되면 100만 가구가 역세권에서 살 수 있고, 그걸 짓는 데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을 종합하면, “월 67만 원 임대료의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는 100만 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일부 규모로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외곽에 분양형으로 공급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

해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는 한편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핵심은 기본주택입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30평대 고품질 아파트에서 월 67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상당수 국민이 내 집 마련 걱정 없이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는, 매우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기본주택 역시 다른 기본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달콤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불투명한 실현가능성, 현실화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문제도 다른 기본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화려한 공약이 실제로 적용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라는 슬로건과 “월 67만 원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10억 원 상당의 30평대 고품질 아파트에 평생 살 수 있다”는 설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100만 가구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공약은 기본주택이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합니다. 100만 호 중 몇 퍼센트를 임대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실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100만 호 기본주택을 공급할 역세권 부지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100만 호를 역세권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다. 분양은 외곽에, 임대는 역세권에 한다는 얘기다”라고 반박합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을 종합하면, “월 67만

원 임대료의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는 100만 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일부 규모로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외곽에 분양형으로 공급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됩니다. 10억 원짜리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1,000조 원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수도권 10억 원 아파트의 건설 원가는 3억 원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놀랍게도 재원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억 원의 원가로 주택을 건설하면 시세가 10억 원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한 주택을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그 주택을 담보로 다시 대출받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재원 투입 없이 기본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세입자의 임대료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현대 금융기법”이라고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설명에 따르면 한 푼의 재원도 들이지 않고, 이자부담도 없이, 민간이 개입하지 않고 공공 주도로, 기본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본주택 100만 호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형에 대해서는

위 설명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분양형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투자해서 공급하든지 민간이 개입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재원 소요 없이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또한 10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해당 규모의 토지를 민간에서 수용해야 하는데, 3억 원의 건설원가를 맞출 수 있으면서 입지가 좋은 토지가 100만 호 규모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재원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원가 3억 원의 주택의 시세가 10억 원으로 뛰는 전제로 “광역교통망이 들어오는 신도시”를 제시하는데,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이 같은 제반 시설도 모두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구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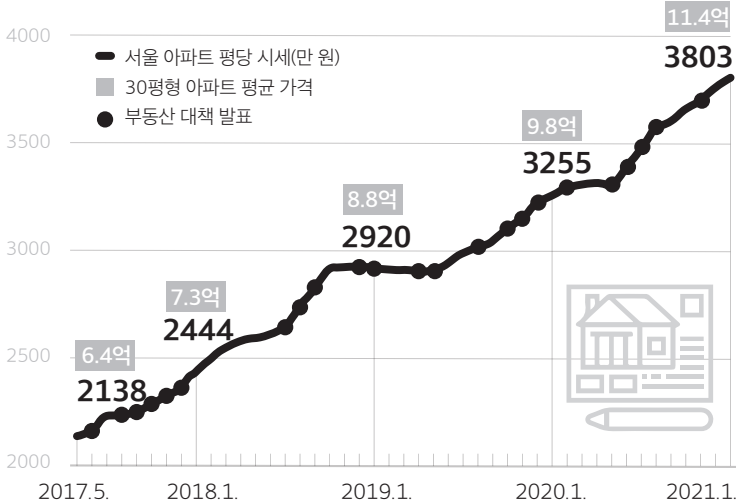
06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주택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본주택 재원 마련 방안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실분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을 펼칠 수 있거나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반복적인 대출을 담보로 주택을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임대형 기본주택의 구상에는 여러 난관과 위험이 따릅니다. 건설원가와 시세의 차액을 담보로 금융기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안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심지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귀결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큼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국가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출처: 《서울경제》 사진자료 재구성)

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데,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설명에 따르면 임대형 기본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을 담보로 자산가치에 맞먹는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대출 이자 및 원금 회수를 국가가 보증해야만 합니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여러 발언과 공약들을 통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가능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보증도 국가가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약에서 “세계적인 금리정상화, 주택대량공급 효과 발생에 따라 주택가격의 조정이 예상”되고, “주택시장의 대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제시한 기본주택 재원 마련 방안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주택이 10억 원에 팔리는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들 사이의 모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임대형 기본주택 50만 호가 공급된다면, 그 시장가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500조 원입니다. 10억 원 시세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겠다고 했으니 500조 원 주택을 담보로 250조 원의 대출이 발생할 것이고, 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및 원금 회수를 국가가 보증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실분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손실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선택은 임대형 기본주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형 기본주택 사업 자체가 좌초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큰 혼란과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을 펼칠 수 있거나 할까요.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주택은 휘황찬란한 외양과 달리 실제로

는 제시한 슬로건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재원 소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스캔들이라고까지 불리는 대장동 스캔들을 볼 때, 공공 주도로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호언장담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07

부채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국가가 낮은 이자율로 1000만 원씩 빌려준다는데,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돈을 빌려줘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긴급 생활비 지원이나 의료 복지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더 쉽게 빚을 지도록 하는 것보다 이런 대책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할뿐더러 실질적·장기적인 도움도 됩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나 최대 1,000만 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장기간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대출 공약을 살펴봅시다. 고소득자·고신용자만 저리의 장기대출을 독점하고, 다수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이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금융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수탈적 서민금융”, “족징, 인징, 황구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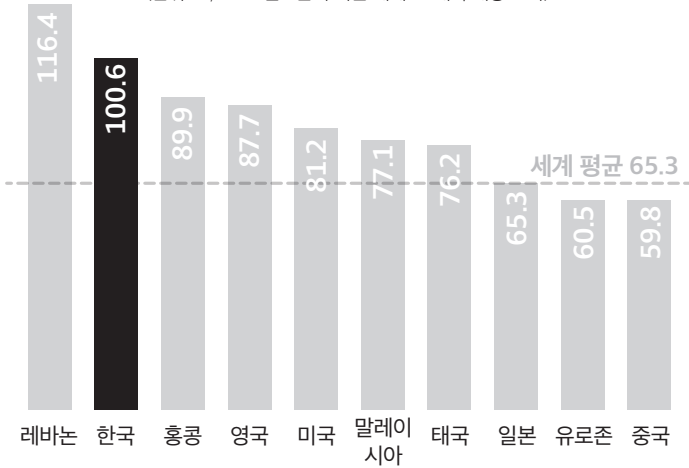
백골징포”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족징, 인징, 황구침징, 백골징포는 조선 후기 군역이 문란해져 양민을 광범위하게 수탈했던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양인계층 수가 감소하자 1인당 군역의 부담을 근거 없이 늘리거나, 군역을 회피하고 도망간 사람의 군역을 이웃 양민에게 부과하거나, 군역의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과하던 것을 이릅니다. 현 상황이 국가가 대출을 빌미로 부당하게 서민을 수탈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건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비판이 일자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며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금융기관,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는 금융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무분별하게 실행할 경우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근거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결과, 미국 경제는 큰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들도 큰 불행을 겪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각국 비교

(단위: %, 2020년 3분기 기준 세계 34개국 대상 조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대해 금융기관의 과잉대출, 즉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대출은 과잉대출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자료 출처: 《중일일보》 사진자료 재구성)

한국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805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성인 중 절반이 기본대출을 이용해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것만으로 200조 원입니다. 기본대출에서는 신용등급을 구분할 수 없어서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대출 상환 실패의 위험부담을 모두 떠안아야만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대출이자라는 시민의 경제활동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의 생활 안정성을 위해 금융자본의 활동을 적절히 규제·감독하고 신용이 낮아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 한국은 이미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이 서민을 수탈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낮지 않거나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합니다. 소득이 매우 낮거나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줘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긴급 생활비 지원이나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더 쉽게 빚을 지도록 하는 것보다 이런 대책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할뿐더러 실질적·장기적인 도움도 됩니다. 이 같은 사회 안전망은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본대출 같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안전망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08

이재명 후보도 재원 마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며, 필요한 예산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써야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대표적 정책 각각에 대해서

는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이 여럿 눈에 띄는 걸 보면, 재정 측면에서 개별 정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날 변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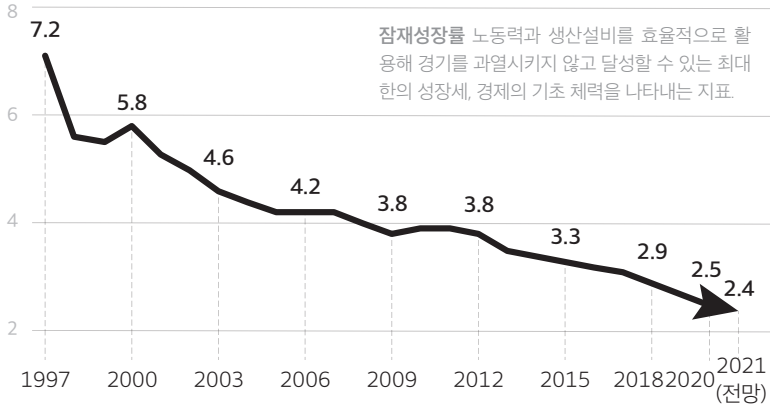
다만 몇 가지 발언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바는 있습니다. 첫째,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부채는 별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 부채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국가부채비율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을 때나 걱정할 일이라며, 국가부채를 다른 나라보다 낮게 유지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며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 증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치에서 증세 얘기는 금기인데,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 외에도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소득세 증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OECD 추산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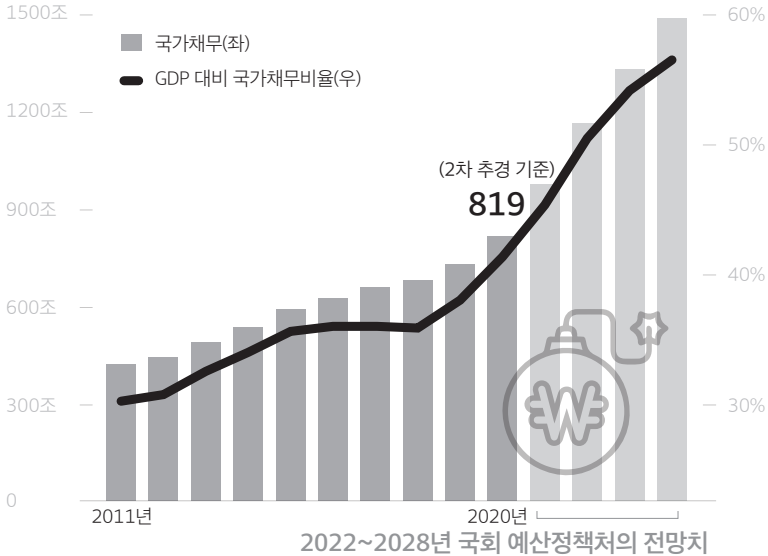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세 가지 요소인 노동, 생산성, 자본 각각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눠봤을 때, 모든 항목이 감소 추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완화할 수는 있지만 역전시킬 수는 없고, 기술혁신 자체도 심각하게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이런 경제전망을 고려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료 출처: OECD, 연합뉴스 사진자료 재구성)

이상을 통해 재정운영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전반적인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규모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은 400조 7,000억 원 규모였지만, 매년 예산 규모가 연평균 8.6% 증가해 내년 예산은 최초로 6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에 2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경제성장률은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원이던 것이 지금은 927조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추이



문제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급격한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증가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갚아야 할 이자 증가분이 소득 증가분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번 돈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며, 빚이 빚을 낚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한겨레신문》 사진자료 재구성)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이던 것이 지금은 51%로 늘었습니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라는 높은 증가요인이 있는 가운데 지출 중심의 재정운영이 겹쳐지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불황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어떻게 운영해

야 할까요. 개인의 입장으로 바뀌서 생각해봅시다. 소득은 충분치 않고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는데, 돈 들어갈 곳은 많은 상황에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돈을 쓰면서 동시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기개발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넘기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야겠지만, 어려움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출을 받고, 무엇보다 대출받은 돈은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의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재정 운영과 가게 운영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국가재정은 가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기도 하고, 국가의 세입·세출 및 국채 발행이 개인의 소득·지출 및 은행 대출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경우 화폐 발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균형재정이라는 제약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도 최종적으로 국부(시민의 재산)로 국가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국가재정이라고 해서 채무를 무한정 늘리고 상황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가게 운영의 실패는 당사자의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이지만 국가재정 운영의 실패는 전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신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재정운영의 방향은 이러한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재정을 사용하는 방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위기를 극복하거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장 듣기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라는 허황된 공약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책을 구사한다면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사회는 매우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읽을거리

- * 김진현, 「포퓰리즘의 무기, 현대화폐이론」,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년 여름호.
- *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들」, 사회운동포커스, 2020.10.7..
- * 「대장동 의혹,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책임져라」, 사회운동포커스, 2021.10.6..
- * 「두 얼굴의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묻지마 이재명 지키기」, 사회운동포커스, 2021.10.26..

이재명 후보의
노동 친화 정책 대해부

01

이번 대선에서 노동조합의 목표는, 노동친화적인 후보가 당선 되어 노동운동이 기준에 요구하던 노동정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에 민주노총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책 방향에 적극 동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는 민주노총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가 놓인 조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대선 시기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친노동’을 표방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실익을 챙기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7년 대선과 문재인 정부 집권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내걸고 민주노총이 요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이나, ‘소득주도성장론’을 표방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에 달했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경기침체와 소득격차 확대

그러지만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존중’ 정책들은 힘을 잃고 좌초되고 맙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자 경제정책이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경기침체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정책 이전에 노동정책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 소득 분배 개선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뒷받침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입니다. 출발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요인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 부문에서의 투자와 혁신입니다. ‘소득(임금)을 인상하면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정은 기술 발전과 투자가 활발한 경제의 호황기에는 ‘마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관계의 혼동입니다. 기술 발전과 투자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과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대와 달리, 불황기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자본은 투자를 줄이거나 고용을 줄입니다. 한국에서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2018~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증가했지만, 총고용 시간이 감소(고용 자체가 줄거나,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정책 실패가 분명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1.5%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부터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었다”거나 “우경화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명백한 실패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성’ 논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실패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노동시장의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당사자가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이 타 부문에 비해 임금·고용 조건이 특별히 좋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나 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 모두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더라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는 세금이 대규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일째가 되는 2017년 5월 12일에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출처: 한겨레 신문)

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민 경제 전체의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될 수 있고, ▲민간부문과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으면서, ▲세금을 통한 비용 지출이 사회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임금수준(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회적 압력이나 제도적 개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공동의 원칙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 결정은 기관별 협의에 맡기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정성’ 논란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한정된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의 진입 경쟁이 치열한 조건 속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의로운 변화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만 여겨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좌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선한 의도’가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한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전세 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각종 규제책과 임대차 3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의 폭등을 불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국가의 노동·경제 정책에는 분명한 현실 인식과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고통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정책과 전략을 돌아보아야

문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에 민주노총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책 방향에 적극 동조해 왔습니다. 따

라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는 민주노총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뼈아픈 실패를 직시한다면, 노동 분야에서 민주노총의 기존 요구들을 전면 재평가하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고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면서 사업장 투쟁을 통한 임금·고용조건의 향상이라는 기존 노동운동의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또는 공공부문·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 부문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기본 시리즈’ 등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보다 더 허황되고 위험합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더 크게 반복하며 한국 사회의 위기를 키울 것입니다. 노동운동은 이재명 후보의 ‘친노동’ 수사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가 놓인 조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02

이재명 후보는 친노동 정치인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120시간 노동 발언 등을 보면 반노동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왜 이재명을 지지하면 안 되나요?

이재명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기본소득이 소비를 강제로 일으켜서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친노동'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패해서 나라 경제 자체를 망치면 '친노동'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동정책을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권재창출이나 정권교체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은 누구냐라는 굵직한 이슈가 중심에 있고, 경제·외교·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쟁점이 형성되는 까닭에 노동정책은 아직 특별한 이슈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의 노동 관련 부분이나 각 후보의 발언 등을 통해서 제한적이거나 평가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 대 노동, 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 모든 사회관계에서 갑을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노동 존중 사회에서 나아가 노동 중심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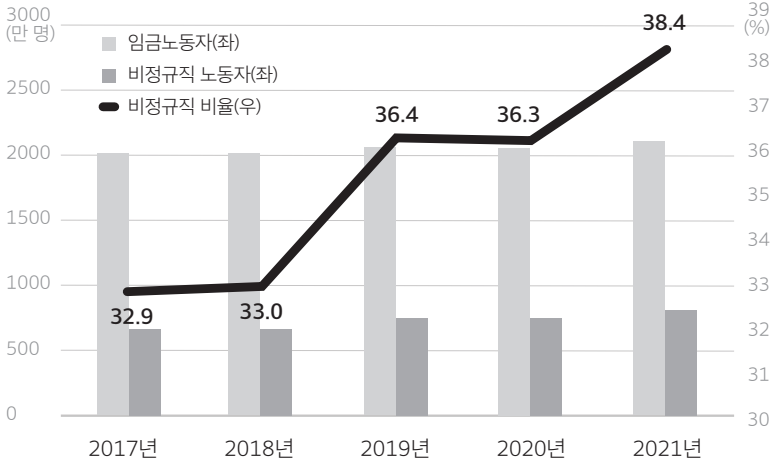
다. 반면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더라”거나, “지금 기술력으로 먹고 산다. 손발 노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 혹은 약자의 편에서 있고, 반대로 윤석열은 노동자, 약자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더 친노동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의 노동정책을 “어느 편인 것처럼 보이는가”로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노동정책은 특정 집단·정체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정책은 곧 경제정책·사회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후보가 노동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려면 그 후보자의 정책이 어떤 원칙에 근거해 있는지, 그 정책과 원칙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패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하면서 노동자 편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다양한 친노동정책의 향연이었습니다. 취임 초기를 떠올려보면,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면 진정한 “노동존중사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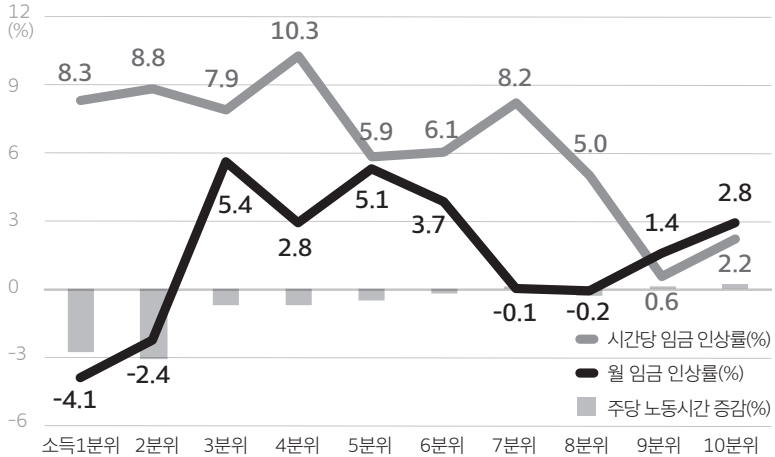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비정규직 제도”를 선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정규직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증가했고, 2021년에는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과 통계기준 개편 핑계를 대지만, 2021년에는 취업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대폭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회”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약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매일 점검했고, 동시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4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임기 동안 최악의 일자리 참사를 겪었고,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을 달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규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민간부문에까지 정규직화가 확산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채택하고 2018년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16.4% 인상합니다. 정부는 경제도 성장하고 소득분배도 개선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경제성장에도 소득재분배에도 실패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2019년 저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대폭 증가했지만, 고용시간이 줄어들면서 전체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대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왜 친노동정책이 전체 노동자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국 사회가 놓인 객관적 현실과 그러한 객관적 현실을 해석하는 경제학적 원리를 무시하고 선의에만 기대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했는데, “소득(임금)이 높아지면 이윤이 줄어드는 기업이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그에 따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학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었는데, 아

무리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자본주의에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커지고, 파이를 인위적으로 분배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경제법칙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니 경제가 성장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자영업자)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대의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 집권 후반기 들어 노동정책 자체가 실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수 있나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기업 임원들이 뽑은 친기업적 광역단체장 조사에서 1위를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반기업적이라는 오해에 항변했습니다. 친기업적이면서 동시에 친노동자적이라는 것입니다. 일견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무분별한 소득주도성장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친기업적이면서 동시에 친노동자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마법’을 기본소득을 통해 살피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임금을 벗어나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기본소득이 소비를 강제로 일으켜서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돈도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경제가 성장해야 세금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재정확장 정책, 즉 국가가 빚을 내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빚도 결국 국민이, 노동자가 일해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빚을 무한정 늘리면 나라 경제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IMF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소비를 강제로 일으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을 예로 들지만, 뉴딜 정책은 소비를 강제로 일으켜 경제가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가능했던 정책입니다. 아무리 ‘친노동’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패해서 나라 경제 자체를 망치면 ‘친노동’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경험했고, 베네수엘라 같은 해외의 극단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실제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했고 그것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재정투입에도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토론하거나 정책의 잘못을 수정하는 대신, 연구자들을 적폐로 몰면서 자기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만 할 뿐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행정가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노동탄압인가

물론 이명박 정부와 같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노조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배출한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는 타당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에 하태경과 같은 극단적 반노조주의자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120시간 발언이나 아프리카 발언 등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친노동자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국가 경제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가 성장하거나 현재 있는 일자리를 더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만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바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만큼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재명 후보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조건에서 단기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기는 어렵다는 점, 여기에 더해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라는 제약조건을 고려하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것도 또한 위험하다는 점,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고용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받아들이기 불편하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존재하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돈, 집, 마이너스통장을 나눠주면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부적절한 발언들로 반노동자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는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과 같은 반노조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윤석열 후보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자유로운 해고를 전제로 하는 노동유연성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해고자유화와 같은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울 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고용의 안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자신이 언급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안정성은 유지하면서 임금격차 문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해야

노동자의 편, 약자의 편으로 보이는 듣기 좋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패를 반성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기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

니다. 조직된 노동자를 넘어서 한국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민주노총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듣기 좋은, 더 큰 거짓말에 다시 한번 속는 것보다는 현실을 차분하게 인식하고 긴 호흡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면, 이재명이 가장 나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노동존중사회나 노동중심사회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동중심사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면서 사회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장기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하고 싶은 불편한 현실 또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친노동자적일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노동자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03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역강부약 정치로 대동세상”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치인이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가 보듬겠다는 “약자”의 이해관계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자를 돕기 위한 정책은 다른 약자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갈등을 강자와 약자 사이의 대립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정규직이 강자

(갑)이고 비정규직이 약자(을)라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역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강자가 특권과 반칙에 기반해 있다면, 강자에게 공평무사한 잣대를 들이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 현실을 바꾸는 것도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를 보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보듬겠다는 “약자”의 이해관계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자를 돕기 위한 정책은 다른 약자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배를 불리는 동안 노동자·서민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서민의 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부문에서 발생한 고용량 감소(해고) 및 노동시간 감소(임금 하락)였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소득주도성장은 목표는 실현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은 노동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서 배제된 자영업자·실업자 간의 갈등을 빚어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든 만큼, 공공기관 노동자와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약자를 보듬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그러나 원칙과 근거 없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가 약자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난 5년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에서는 뒤로 숨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약자 간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자와 소통의 촉진자 역할도 방기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까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문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그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과감한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변칙변칙한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를 적폐로 몰아갔던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정된 실패가 현실화되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는 할까요?

약자와 약자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

“부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억강”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지난 5년의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약자와 약자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스캔들을 보면, 이재명의 “억강부약” 중 “억강”도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자라 하더라도 자기편이라면 “억강”의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특혜를 통해 더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출마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영역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강자와 약자 사이의 대립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정규직이 강자(갑)이고 비정규직이 약자(을)라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갑을관계”로 규정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산적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자를 보듬는다는 말의 성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은, 다른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

습니다. 방역정책, 사회정책을 구사하는 데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모든 당사자에게 오해가 없도록 문제상황을 투명하게 밝힌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인정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현실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누구나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세운다. 이를 위해 각계가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 (3)관련 당사자는 합의된 목표하에서 도출된 대책이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준수한다는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이 완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문제의 객관적 인식, (2)공동의 목표 수립, (3)모든 주체의 책임 있는 참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 준 태도는 이러한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어느 한 쪽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1)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 역시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3)모든 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경제·노동 정책과 입장을 살펴보면, 그가 강조하는 ‘역강부약’은 한국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04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노동자운동의 독자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운동의 요구가 민주당 정부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면 ‘노동자운동의 독자성’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친민주당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라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노동운동의 주요 인사가 총선·대선·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민주당에 합류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는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크고 본격적입니다. 양대 노총의 전·현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노동계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거나, 정책 연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오답’

노동계의 이재명 지지 흐름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좌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5년 출범 이래 민주노총은 기성 정치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변혁에 대한 노동운동의 열망을 ‘독자적으로’ 세력화

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져 왔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1997년 대선 민중후보 운동,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등으로 이어졌지만, 진보정당이 몇 차례의 갈등과 분열을 겪으며 장기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민주노총은 선거 시기마다 방침을 정하는 데에도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정해진 방침의 영향력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겠다며 지난 8월 출범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이하 노동광장)'이라는 노동조직이 있습니다. 노동광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행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에 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진보정당 분열 이후 고착화된 구조”를 지적하며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활로를 찾기 힘든 시대에, 노동운동의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노동운동이 처한 곤란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포기’ 또는 ‘배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선택지가 한국 사회의 노동·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명백한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 사회가 놓인 경제적 조건을 무시한 채, 당장 입에 달게 느껴지는 선심성 공약을 시대의 대안인양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책연대 대상으로 선택한 노동조직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이 출범했다. 노동광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신승철·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양대노총 전 위원장들이 함께 참여했다. (사진 출처: 매일노동뉴스)

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와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노동운동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단기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확대하며 대안적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라는 '오답'을 택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운동의 독자성이란 무엇인가

반면 이재명 후보 지지나 정책연대를 비판하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전·현직 대표자들은 지난 8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방해하는 민주당 투항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연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치의 꿈을 버릴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4명의 민주노총 전직위원장들이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활동을 통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직을 사퇴한 것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의 독자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공유해 왔습니다. 1~2년 후 이러한 정책이 부작용과 갈등을 불러왔을 때에도 그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반대 세력의 저항 앞에 포기했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를 이렇게만 평가한다면 유사한 정책을, 반대세력을 누르고 더욱 단호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논리적 귀결일 것입니다.

노동자운동의 요구가 민주당 정부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면 ‘노동자운동의 독자성’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통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할 때, 비로소 기성 정치로 수렴되지 않는 정치세력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노동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의 내용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민주노총이 친민주당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고, 임금과 고용에서의 연대로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는 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읽을거리

- * 김동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가을호.
- * 김동근, 「문재인 집권 하반기 노동자운동의 과제」, 《계간사회진보연대》, 2020년 겨울호.
- * 류미경, 「노동조합의 기본소득론 비판」,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1년 여름호.
- * 이소형, 「문재인 정부 4년, 노동조합운동의 흐름」, 《계간사회진보연대》, 2021년 봄호.
- * 이소형 외, 「문재인 정부 4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간사회진보연대》, 2021년 봄호.
- * 한지원,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여름호.

'한다면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관 대해부

왜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는 건가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면 추진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대기업, 엘리트 언론, 주요 정치 후원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공모해 사회 시스템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조작해왔다. (나는)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즐겨하던 연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뜻이 무조건 국민의 뜻이라고 가정하고, 그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을 기득권, 부패세력이라 공격하면서 지지층을 만드는 게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정을 평가하면서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 산후조리 등 온갖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았지만, 지금은 다들 좋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을 많이 성공시켜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60%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경기도민들은 이 지사의 도정에 매우 만족”한다는 것을 큰 성과로 강조합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가 즐겨 하는 말이 바로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비유입니다. 이처럼 정치가의 성과와 행동에서 유권자의 지지율과 만족도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근본원리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나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규범과 제도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하더라도 비판할 기회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토론하고, 증명하고, 반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국회에서도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에서도 그러한데, 다수결로 선출하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당 독식을 막기 위해 위원선임과 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만장일치로 법안 심사를 의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필리버스터 즉,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숙의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거침없는 업무수행 능력과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역화폐 논란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정책인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자, 이재명 후보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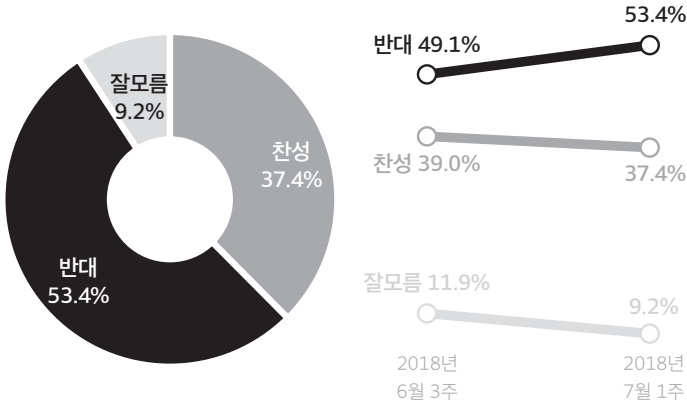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반론을 제시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의견을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들을 상정하고 이를 공격하면서 지지층을 형성하는 행위는 포퓰리스트들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국민의 ‘머슴’인 정치인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밤낮없이 일하면 되는데, 기존 정치인들이 부패하여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지배자로 군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재벌, 땅 부자, 보수 언론 등 소수의 기득권층을 상정합니다. 즉 다수의 국민과 소수의 적폐 세력의 편을 가르고 후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지지층을 형성하면서 정치적 아웃사이더에서 중앙정기관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대기업, 엘리트 언론, 주요 정치 후원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공모해 사회 시스템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조작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즐겨하던 연설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씩어 빠진 공직자들이 나랏돈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 언젠가 한 번은 꼭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며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을 비판하는 언론, 지식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인 여론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제2차 제주 예멘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2018년 7월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제주 예멘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입니다.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이 예멘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반대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고 해서, 난민의 인권을 도외시키고 국제 협약을 무시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료출처: 《리얼미터》)

좋고 싫음이라는 단편적인 감정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여론 조작을 시도하거나 여론의 향배를 기득권에 대한 협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구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합의가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과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현실 가능성을 두루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훨씬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자질은 비록 지난하더라도 협상의 과정을 통해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아닐까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 원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만들고 합의한 법을 통해 사회가 운영

됩니다. 물론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대의제를 우회하는 흐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포퓰리스트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정당정치 한계점을 파고들어 의회를 우회하고, 시민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자임합니다. 비인격적인 법의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일반의지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인격화된 지도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 운영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의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제도와 규범을 보완하고 확대해야 하지 그 자체를 우회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02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하는’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은 지도자로서의 덕목 아닐까요?

독재자의 성향을 지닌 정치인들은 경제발전, 불안정한 사회 갈등 해소, 적폐 청산을 통한 정의 실현 등 대개 대의를 표방하면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개혁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견제 장치를 제거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면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으나 비상조치권,

행정입법권, 개헌발의권, 국민투표 부의권과 같이 막강한 권한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고, 때마다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많은 사회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면 웬만한 일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2024년 총선까지 국회 180석을 등에 업고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잘 뽑으면, 전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일도 입법과정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시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신속한 결정을 통해 시민 다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에 기대어 이뤄지는 일들은 그만큼 다시 뒤집히기도 쉬워 질뿐더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미국의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의사진행 방해가 심해지자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012년에는 이민법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청소년이나 군 복무를 마친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내놓습니다. 사안의 정당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의회가 저지한 법안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자제라는 규범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해 섣다운을 불사했고, 그 후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장벽설치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그 결과도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절차’는 단지 합법적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정치적 경쟁자들과의 협의, 설득의 노력, 이해관계의 조정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규범과 절차를 한번 파괴하고 나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차례의 개헌을 경험한 한국 현대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의 후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땅한 견제 장치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개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견제 세력도 취약하고, 제도적 장치도 미미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 세력으로서 정당성을 잃었고, 한국의 제도권 정치는 금권선거나 측근 비리 등 민주주의적 제도와 규범이 사회에 온전히 정착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주의의 규범조차 많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아도 민주주의의 후퇴는 군사 쿠

데타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1933년 총리에 임명되었고 그 해에 곧바로 의회의 입법권을 몰수하는 수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전복했습니다. 이보다 서서히 이뤄진 사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야당 인사와 판사, 언론인 탄압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를 성공하게 됩니다. 2017년이 되자 후계자인 마두로 정권에서는 의회 해산을 감행하면서 명실공히 독재 정권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의회 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2015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도록 법을 개정한 폴란드의 사례), 언론을 탄압하기도 하며(명예훼손법 개정을 시도하고 언론사의 사업 허가권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의 사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은 민주주의를 개혁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견제 장치를 제거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합니다. 독재자의 성향을 지닌 정치인들은 경제발전, 불안정한 사회 갈등 해소, 적폐 청산을 통한 정의 실현 등 대개 대의를 표방하면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반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진압을 통해 실행의지를 내비칩니다. 그간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들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에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추진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법과 절차를 지키려는 “절제력”이 아닐까요?

이재명 후보의 말·말·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브렛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위험 신호를 연구해서 독재자를 감별하는 테스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협박 중 3)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발언들 속에서 이러한 경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 * 도의회 패싱 논란 : 2021년 8월 13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청와대,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반대한 적이 없던 경기도의회(142석 중 더불어민주당 132석)에서 이재명 지사의 독단적인 언론플레이를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 * 2017년 9월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하던 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본회에서 부결시켰다. 그러자 이 시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에 이름을 숨겼지만, 예결위,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추측을 기반으로 반대한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 * “‘180석’ 얘기를 자주 하지 않나.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은 날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 (2021.7.15.)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아주 후안무치한 도적 떼 수괴 같다 (….)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다시 좃볼로 다 타서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2021.9.27.)
- *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2017.7.18.)
- *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일 독재·매국·학살 세력이 이 나라 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2017.1.)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 *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 (2021.8.2.)
- * “TV조선과 전면전을 시작한다. TV조선을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습니다.” (2017.1.)
- * 성남시의원 고소 : 2012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덕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판교 철거민들의 몸싸움을 언급하고, 이재명 후보 부인의 관용차 이용 의혹 발언, 성남보호관찰소

용도 제한 위반 발언 등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과 이재명 후보의 ‘인권변호사’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정기영 전 시의원도 이재명 후보에게 고소당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03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법치주의자’라고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을까요?

법치주의라고 하면 강력한 공권력 집행, 법을 통해 나쁜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일벌백계라는 말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치라고 하면 강력한 공권력을 연상하고, 법을 통해 나쁜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법치를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가 경기지사로서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꼽는 계곡 정비사업입니다.

그는 경기도의 계곡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자,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강제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름 한 철 장사이다 보니 조금 위반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위법 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 형사처벌을 하여 “아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책 집행이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저는 법치주의자다. 법대로, 합사된 대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계곡인데 왜 자기들이 점거하고 물에 못 들어가게 하나. 불공정, 불법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을 계도해야 하며, 그것이 법치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법을 무기로 삼는 국가폭력과 법 적용의 이중 잣대가 만연했던 지난 역사로 인해, 법 집행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재벌과 권력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는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일반적인 정의 관념’을 토대로 합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비판받는 일이 법망만 빠져나갔다고 해서 용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치주의를 완성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 앞에서의 평등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횡포라고 판결에 수궁하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방해를 자행했습니다.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조국사태를 촉발하였고,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는 ‘합법적 불공정’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불공정한 행위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치주의가 단순히 현행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소극적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국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연관자들이 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도 지금까지 본인의 행동과 발언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2018년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SNS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혹을 다룬 《뉴스특급》의 제작자와 진행자, 출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후 무혐의 처분이 나자 SNS에 “집권당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건가요?”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했습니다.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더니,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 판결을 부정하는



정동칼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학 박사

민주당만 빼고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인연구관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평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협약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적인원 1700만명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 선거에 갖다바쳤다.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집회는 2017년 4월 29일의 23차까지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주최 측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 들었나?”며 ‘정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의 여망을 선거에 답는 순간 모든 것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 깔아놓은 주단 길에 다름없었다.

지금 야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층의 권력과 맞바뀌고 있다.

우리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워서 개 좋개’ 열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물론이고 노동운동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노동존중’ 구현과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임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 등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경향신문》)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인들이 거리낌 없이 고소·고발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조율되기보다는 모든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에 일임하는 현상이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고소·고발이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문제지만, 최근 논란이 된 대표적 사안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입니다. 2020년 초에는 민주당에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대학교수와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취하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규탄 대자보를 붙인 20대를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

이 잇따르자 명예훼손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본인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기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법적 대응을 불사했습니다. 2014년에는 시청사를 찾은 민원인 70명가량을 특수 건조물침입 및 공무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2016년에는 네티즌 25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급기야 2018년에는 지방선거 경선 와중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민주당 지지 성향 네티즌들을 고소한 전력도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동부연합 관련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를 보도한 《서울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책임 범위보다 형사 책임 인정 범위가 좁고 엄격하여 법률가들은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형사고소까지 한 점은 의도성이 다분한 대응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압력을 취할 목적으로 법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법대로 해결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적 이상 일까요? 사회구성원들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편적인 법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회 즉, 법의 집행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정의롭고 민주주의의 이상에 더 가까운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04

박근혜 정부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다르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오래된 민주화의 열망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민주화’가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는 21세기 한국은 (물론 과거 전제군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타 민주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대통령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기에 기원을 두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화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당시 제헌국회 의원 다수는 의원내각제를 모델로 헌법을 기초했지만, 강력한 권한을 원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밀어붙여 제헌헌법에 대통령제적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간선제로 타협을 보았지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정치깡패까지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954년 개헌으로 국무총리를 없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따라

서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으며 민주화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군부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제를 복귀시켰습니다. 1967년에는 3선 개헌을 통해 집권당을 청와대로 종속시키는, 청와대 중심의 당-청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당 기능이 무력화된 대신, 대통령 비서실의 권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하에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의 축소, 나아가 정당기능의 회복과 의원내각제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국 내 권한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힘이 셉니다. 특히 인사권이 어마어마한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한국은행 총재 인사권뿐만 아니라 332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 되는 '청와대 정부'도 특징입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국가들보다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대통령 권한 확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졌는데, 이전에는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이 1만 개였다면 3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청와대 규모도 계속 커졌습니다. 민주화세력이, 자신들이 비판해온 과거 정권들의 권위주의적 유산을 오히려 강화해 온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뀌기는커녕 강

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규모는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가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청와대는 1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1년 예산으로 1천 9백 억 원을 사용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청와대 규모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 비서실 인원과 예산을 줄인 것과 대조됩니다. 국정 운영에서도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그 어느 장관보다도 전면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큰 문제이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행정부와 최고권력자가 아니라 입법부와 의회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더 민주적이라고 지적하듯,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도, 2017년 대선에서도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각제가 낫다고 발언했습니다. “현 대통령제에서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연방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하는 ‘책임총리제’,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정당정치’, 그리고 ‘사법부 독립’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했지요. 2017년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밀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제왕적 권력 나누겠다”

“권력기관 정치독립…여건 되면 평양에 갈것”
국무총리 이낙연, 국정원장 서훈 지명

1호 업무거시는 ‘일자리 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열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랑홀에서 취임선서식을 한 뒤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통합과 공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 가운은 늘 서로 경쟁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심으로 부끄럽다”며 “이번 선서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갈까”를 묻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처음 지지해

주시고 무리과 아예를 믿고 토론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 권리를 선안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어떤 기관도 두 소분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경찰-검찰 등 광범위한 대안 개혁에 나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 “지방-세력도 통합을 이루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광은 작아도 는 날씨가 온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인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영훈 청와대 건강실장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정비와 인선에 나섰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검소한 권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헌 논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찰개혁’ 등의 이슈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림 출처: 《한겨레신문》, 2017년 5월 11일자 1면)

정치가 결합되어 터져 나온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인 만큼,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대신 의회, 정당, 내각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 기구들은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오래된 민주화의 열망에 역행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후보 시절에 ‘말’로는 다양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안을 내놓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보인 적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특징으로 손꼽히는 ‘결단력’, ‘추진력’은 민주주의 규범조차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로 드러납니다. 단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180석 얘기를 자주 하지 않나.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

다.”(2021.7.15.)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경기도의회를 패싱하고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회는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데도, 당시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문제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던 터라 도의회와 일체 논의 없이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2017년 성남시의회가 무상교복 사업비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에 이름을 숨겼지만” 반대한 의원을 추측할 수 있다며 해당 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습니다. ‘날치기’도 ‘패싱’도 어렵다면 정치적 ‘보복’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 문제인 정부를 거치며 약화된 의회와 비대해진 청와대를 만나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05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면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는 게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의회가 무능해서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문제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상황을 침묵하거나 옹호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체적 인식에서 의회는 걸핏하면 싸움박질 하는 곳, 정당은 계파 정치가 난무하는 믿을 수 없는 곳, 내각이나 사법부는 관료주의적 엘리트입니다. 그에 비해 대통령은 훨씬 단순명료하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정치 개입도 의회나 정당을 통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큰 효과를 냅니다. 어떻게든 대통령만 바꾸면, 아니면 어떻게든 대통령만 결심을 하게 하면,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정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국민의 복잡한 이해를 혼자서 대표하거나 조율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는 5년에 한번 있는 대통령 선거에 다 담길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나머지 후보에 표를 던진 민의가 묵살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대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여 당선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실제로 중심이 되는 것은 의회와 정당입니다. 각 정당은 다양한 시민 집단을 대표하고, 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여 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상시적으로 담당합니다. 의회는 또한 행정부 권한의 견제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가 행사하는 주요 권한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가집니다. 영국,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는 차치하고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

인 미국과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이미 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발동을 삼갔던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의회를 우회하여 정부가 원하는 일을 추진하거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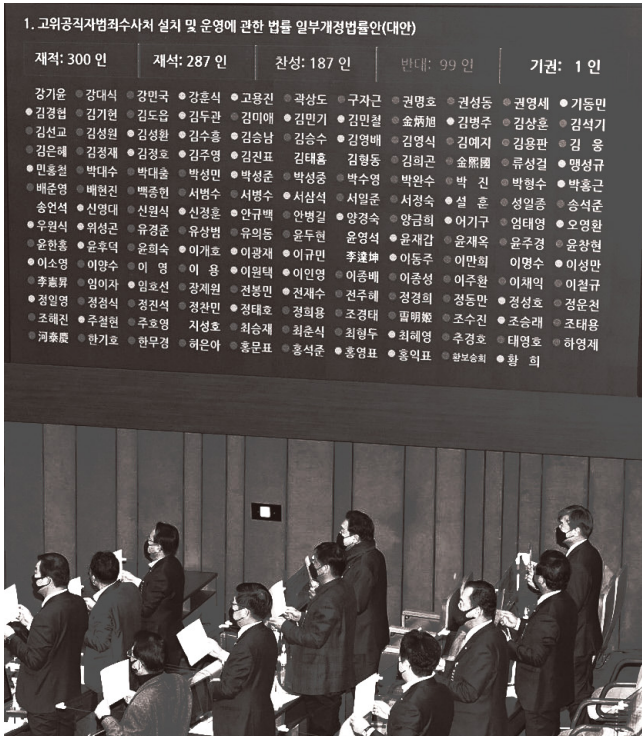
먼저 개헌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전국적 ‘촛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러진 대선이니만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지지부진하니 어쩔 수 없다”며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발췌 개헌’이나, 박정희 정부 시기의 ‘3선 개헌’, ‘유신헌법’의 사례가 있듯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도한 개헌은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고치는 셈이므로 기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큼니다. 해외에서도 중국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등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 개헌안은 그 정도 내용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하루빨리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두환 정부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했는데, 정작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없어 많은 전문가와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한다고 보도되었지만, 실제 개헌안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바꾼다고 했지만, 감사원장·감사위원 인사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으니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뿐더러 오

히려 독립기구가 되면서 생기는 직무감찰권을 대통령이 오남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 중 하나로 평가받은 ‘4대 권력기관’장(검찰청장, 국세청장, 경찰총장, 국정원장) 인사권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법원장·대법관 인사권도 유지되었습니다. 후보 시절,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결국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는데,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 연임’ 개헌 부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닦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문제부터 논의하지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여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20대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제 대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였는데, 이런 논의궤적을 무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연임제를 개헌안에 명시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이것으로 가져옵니다.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냐는 문제와 별개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 취지에 맞는 국회 논의를 피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추진 의지는 강한 반면 논쟁의 여지는 큰 사안들에서 의회를 우회하여 시행령을 남발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임기 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에는 없는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음에도 더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2019년 9월 법제처의 역대 정부 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부령)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오전에 국회 법사 위 헌법소심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법 안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여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7분 만에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헤럴드 경제》)

심사 및 공포 건수 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 4개월여 동안 2053건의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3667건)의 55.9%, 이명박 정부 5년(3762건)의 55%를 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권도 남용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31명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렇게 야당 패싱이 남발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관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그와 다릅니다. 청문보고서 마감 시한이 지나면, 평균 1.8일 만에 ‘총알 임명’을 했습니다(2021년 2월 기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하면 생각나는 사람 대부분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입니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갈등을 빚은 인사들은,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되기 쉽습니다. ‘조국 논란’, ‘추윤갈등’이 그 예입니다.

야당을 ‘패싱’하고 ‘의석으로 찍어누르는’ 행태로, 행정부 견제와 토론을 통한 갈등의 조정이라는 의회 기능도 약화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 뒤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예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당 독식을 막기 위해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18개를 독식해버렸습니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한겨레》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된 원 구성 협상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권과 여당을 견제할 수 있어 주로 야당이

차지해왔지만, 이것까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 가능합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비토)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은 안건 기습 상정과 기립 표결 등으로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독려했으며, 통과 직후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이러한 민주주의 위협 행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옹호하고, 오히려 한 술 더 뜨는 말을 해왔습니다. “과감한 날치기”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고,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공수처 설치가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공수처법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에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 조항을 넣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와 같은 그의 저서들을 보면, 보수정당, 재벌, 국정원, 언론을 악한 기득권 세력으로 묘사하고,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더욱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득권과의 한판 전쟁을 할 의사나 용기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분명히 말하는데 Think보다 Act!”라는 겁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 투표로 뽑은 정치인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까지 폐단이 많았으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기관의 통제와 악용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같은 엄청난 의혹을 억누르기 위해 사법기관을 정치수단으로 삼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부터 내건 공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검찰수사권 축소)하고,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분리해 권력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검찰 대신 강해진 경찰과 새롭게 탄생한 사정기관인 공수처 모두 우려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사법부로 직무독립성이나 신분이 보장된 검찰과 달리, 경찰은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기관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청 내의 수장, 나아가 행정부의 수장(대통령)에게 집중될 위험이 매

우 높습니다. 공수처 역시 청와대·여당과 긴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제도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공수처 구성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5000여 명의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쥐고 흔들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래 정치적 중립을 핵심으로 하던 검찰개혁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계기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바로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여기서 민주적이란 정치인이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책에서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이 검찰을 통제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한다”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치인에 의한 검찰통제가 언제나 가능하고, 또 적절하려면 정치권력이 항상 선의를 갖고 있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려 할 때 정치권력이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지는 정치권력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나아가 그 자신에게 유리하게 ‘중립’을 판단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조국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중국에는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를 강행한 점을 떠올려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며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황제조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사법부를 자의적으로 통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자의적으로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 또는 대중을 대표한다는 정치인이 관사를 대신해 여론 재판을 하고, 사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협상으로 법을 멋대로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때로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부와 검찰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본인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한 FBI 국장을 해고

하기도 했죠. 이때 정치인의 통제는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사용하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FBI를 한국 사법부와 곧바로 유비할 수는 없지만, 선출된 권력의 수사기관 통제가 독재적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여당 및 검찰·공수처 등의 행보 역시 이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권에 칼을 겨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문 대통령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권 말기와 퇴임 이후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인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여권 믿을 맨’이자, 월성 원전 평가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얽혀있는 부분이 많은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정권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며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중요 피의자를 사실상 의전했다는 것입니다. 공정·독립성이 생명인 권력비리 수사기관이 공정해 보이지 않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합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의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사주의혹을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발사주 사건이 고발 4일 만에, 제보사주 사건은 22일 만에 입건·수사에 들어간 점에 대해 형평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부실수사가 지

적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은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 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청은 누락했습니다. 비관이 이어지자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 등 핵심부서는 제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 대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 등이 빠진 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야당의 질의가 있는 후에야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입니다. 이 밖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하거나, 유 씨가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내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기에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후보가 얼마만큼 연루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든 없든 정치인의 통제를 받는 검찰·공수처와 경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미래를 점치긴 어렵지만, 과거를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윤 전 총장은 “검찰,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또 총괄지휘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가의 사정기능들이 작동해야 한다”며 “그동안 현 정부의 사정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진영일 때에는 가차 없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자기 진영일 때에는 스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본다면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인 듯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기관의 기능 정지를 넘어 통제와 악용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같은 엄청난 의혹을 억누르기 위해 검찰, 경찰, 공수처를 정치수단으로 삼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 그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같은 추진력은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07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가짜 뉴스’가 많아서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의 문제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계기가 부패한 언론(과 검찰)이 정의로운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피해의식에서든, 스스로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어서든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과 기사열람차단을 무기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 퇴임 후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 보도를 막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검찰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 개혁시리즈에 해당하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골자입니다. (현재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는 대신 국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각 항목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가짜뉴스나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손해배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언론개혁은 언론개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한국은 이미 언론매체가 허위정보를 보도하면 고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며 징벌적 배상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출된 개정안(열린민주당 최강욱 안) 중에는 현재 독립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기관인 ‘언론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상 정부 내에 언론 규제기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모호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기준까지 적용된다면 정부가 언론을 적극적으로 휘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작 민주당이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한 가짜뉴스는 언론중재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의 주된 통로인 유튜브나 SNS가 아니라 신문·방송과 포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한국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 유엔인권 전문가와 외신기자협회 등 국내외의 우려와 지적이 매우 많았음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경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5일 새벽 4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절차도 매우 갈등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공했습니다.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 대통령”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더 노골적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망신 주기나 아니면 자살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도 온라인 상에 돌아다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악의를 가진 언론이 무고한 청와대, 여당 인사를 음해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다며,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언론인 김어준 씨 등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보도 대부분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허위·조작 보도의 ‘피해자’들인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혐의 대부분은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개정안 입법 계기가 부패한 언론(과 검찰)이 정의로운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피해의식에서든, 스스로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어서든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과 기사열람차단을 무기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 퇴임 후 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21년 7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드루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과 20대 국회의원 김경수가 2014년에서 2018년 4월 사이에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기사에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타 후보 비방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이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출처: 《뉴스1》)

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 보도를 막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언론과 비판적 의견에 대해 고소·고발을 수단 삼아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SBS》, 《서울신문》, 《채널A》 등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남발했고, 시의원, 심지어 민원인과 네티즌을 대상으로도 고소·고발을 제기해왔습니다. 그의 대표정책인 지역화폐제도를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적폐” 등의 표현을 쓰며 조사와 문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발언에서도 그의 위험한 언론관이 드러납니

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팩트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해당)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도 법적 대응을 정치적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봉쇄’ 또는 ‘공격’의 도구로 활용해온 이재명 후보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손에 쥐다면 얼마나 더 과격해질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언론관 역시 극도로 부적절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정권비리가 보도될 수 있을까요. 정권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선뜻 낼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8

법치나 민주주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노동조합이 굳이 관심 가져야 하나요?

민주노조운동은 그 태동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답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느 편도 아닌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조국 사태’니, ‘추-윤갈등’이니,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이니, ‘비례위성정당’이니 하는 이슈들을 피곤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뉴스가 붓물처럼 쏟아지고, 여야가 수십 번씩 공방을 이어가지만 뭐가 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만도 당장 절박한 사안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조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민주노총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 내 토론과 조합원 교육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지금도 민주노총이 한반도 평화, 여성 인권,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여러 분야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이 노동자가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적 노동자운동의 역사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 없이는 노동 현실의 진전도 어렵고, 동시에 노동자가 움직여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왔던 역사적 사실이나, 2016-17년 촛불에서 민주노총이 보여준 주도적 역할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방기해왔습니다. ‘조국 논란’, ‘추-윤갈등’, ‘대장동 특혜 논란’ 등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마다, 민주노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시기에, 박근혜-추미애 영수회담 반대,

국회 탄핵소추 가결 촉구,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요구 등 국면이 바뀔 때마다 명확한 입장을 내면서, 이것으로 조합원을 조직하고 촛불집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행보에서 일종의 ‘취사선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최근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2021.9.30.)입니다. 이 성명에는 사업을 최종 승인한 책임자이자 세간의 관심이 단연코 가장 많이 집중되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대장동 논란에서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든, 지금 상황에서 이에 대해 가타부타는커녕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2016년 말, 민주노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박근혜-최순실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의 ‘이재명 없는’ 민주노총 성명은 국민의힘 궤상도 의원만 수차례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논란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을 삼가게 된 것은 왜일까요? 지난 4년간 민주노총의 활동 방향이, 민주노총 및 ‘민중운동 진영’의 주요 요구가 이미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에 흡수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며 문재인 정권이 이를 충실하게 시행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요구는 주로 “약속을 지켜라”,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라”, “왜 더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냐”라는 어조로 표출되었습니다.

큰 방향에서 문재인 정권과 척을 지지 않는 길을 택하다보니, 앞

뒤가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17년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발간한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 보고서를 참고해봅시다. 여기 담긴 ‘100대 과제’는 (1) 재벌체제 (2) 공안통치기구 (3) 정치·선거제도 (4) 일자리·노동기본권 (5) 사회복지·사회공공성 (6) 평등권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7) 남북관계·외교안보 (8) 위험사회 구조 (9) 교육 불평등 (10) 언론이라는 10가지 분야를 망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것과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이 대표적이죠.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요구들에 비판적이었지만, 민주노총 및 민중운동 진영 다수는 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 안았지만, 촛불 보고서에 있는 끝이곧대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경찰은 검찰보다 더욱 청와대 등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찰권력의 분산과 민주주의적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에는 ①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법치주의적 통제 시스템 ②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검찰개혁에 포함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권 통제권을 맡기는 것은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특히 처장의 임명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성명] 하야하라. 박근혜-최순실 일파와 뇌물공여 재벌자본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by 관리자 posted Oct 28, 2016 Views 3011

[박근혜 하야 촉구 성명]

하야하라 박근혜-최순실 일파와 뇌물공여 재벌자본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많은 연설을 했으나 자신의 말과 글이 아니었다.
국정을 명분으로 수많은 인사를 단행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다.
외교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마저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
대통령 권력남용에 국민의 질서는 항진되었고 재벌의 검은 돈이 흘러 넘쳤다.

박야조로 최순실-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유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최대의 사태를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
최순실 게이트인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인가? 아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한 헌법파괴 범죄다.
두려운 것은 두 명의 주인공이 만들어 온 국정행각의 전모가 아직 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있다.
재벌자본이 미르-K재단에 800억원을 선뜻 헌납한 이유가 노동개혁 추진강행의 대가였음이 밝혀졌다. 재벌회장들을 정와대로 불러 미르-K재단 자금헌납을 요청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명백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뇌물공여의 대가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노동개혁, 성과퇴출제는 그 자체로 원민주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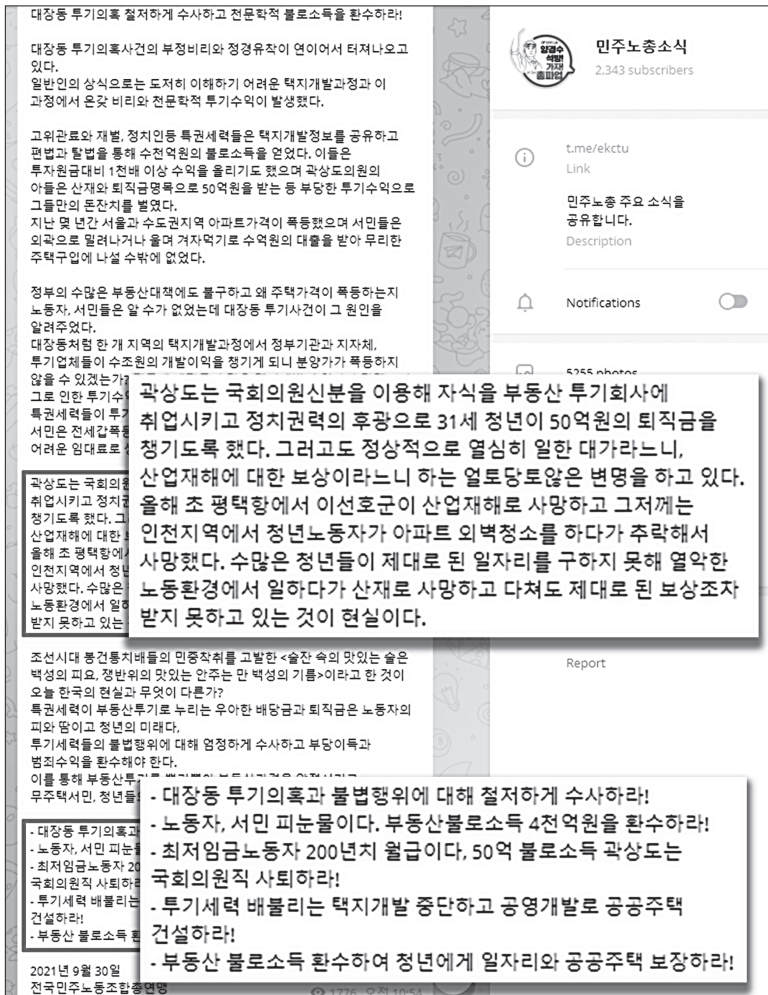
국민들은 낮부끄러워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을 지경이라고 한다.
사머니즘 정권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통문이 하루만 지나면 사실상 확인되는 현실이니 밝혀야 할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가라앉았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69%에 달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나라만 생각한다는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하야하라.
대통령의 사과는 그 자체로도 거짓이었고 사과문조차 사법처리의 대상인우병우가 작성했다고 한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나 증거은폐나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성난 민중의 분노의 하야요구를 가법계 여기지 마라.
마리 앙투아네트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검이 불법 권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야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헌법파괴 범죄를 낱말이 규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자연인 박근혜와 그 일파들을 모두 구속수사 하는 것이 법의 형평이고 정의이다.
아같은 특검을 달리당락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아당에 요구하는 것은 특검정쟁이 아니라 하야요구를 분명히 하고 거리로 나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정치권력은 바뀌어도 자본권력은 더 커져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뇌물자급 모금책인 전철현은 해체되어야 하고 정부 노동개혁을 자행한 재벌자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렇기에 붓을 들었던 '하야하라' 국민의 요구는 단지 대통령 교체가 아니다. 민중주제 민중참여의 새로운 민주주의, 재벌중심 경제체제 개혁, 양극화+불평등 해소,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이야말로 거리에 나선 99% 민중의 절박한 요구다.

2016년 10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6년 말, 민주노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며 '박근혜 퇴진'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징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함구'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진 출처: 민주노총 홈페이지 및 텔레그램 채널 갈무리)

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검찰 죽이기’로 나타났을 뿐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에는 무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비토)을 무력화하여,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곧바로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문제인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이 예상했던 우려들을 안고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은 것이지요.

창립 이래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는 민주노총이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안들을 피해가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OK 사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요구했던 정책들의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세력이라고 자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한다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른 이익집단과 구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과제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진보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대안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구분되는 독립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읽을거리

- *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 《사회운동포커스》, 2021.08.23..
- * 「이재명이라는 오답」, 《사회운동포커스》, 2021.06.07..
- * 임필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어가는가?」, 《계간사회진보연대》, 2020년 겨울호..
- * 임필수, 「문재인 정부 평가와 2021년 정치전망」, 《계간사회진보연대》, 2020년 겨울호..
- * 「법의 지배보다 민주당의 지배가 낫다는 여권의 신종 독재」, 《사회운동포커스》, 2020.09.24..
- * 「후안무치한 민주주의의 파괴자들: 더불어민주당 창당에 부쳐」, 《사회운동포커스》, 2020.03.23..
- * 「추 장관의 사법방해와 자연국가로 타락하는 문 정부」, 《사회운동포커스》, 2020.02.11..
- * 「검찰개혁인가,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인가?」, 《사회운동포커스》, 2019.11.11..
- *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19.09.10..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외교정책 대해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외정책이 ‘국익중심 균형외교’ 노선이라고 하는데, 인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의 ‘국익중심 균형외교’란, 첫째, 경제적 이권을 대가로 중국의 위협적인 대외팽창 정책을 용인할 수 있고, 둘째,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셋째, 북한에 대하여 실용적인 통일외교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한반도를 위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익중심 균형외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중갈등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균형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균형외교란 정확히 이야기하면, 과거 한국의 노선이 미국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이동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10차 토론회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예속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 한국지방신문협회 토론회에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이 그

동안 미국과 주종관계였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언하자 미국과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제적 이권을 대가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의 정책을 용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중국해 논란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국익을 중시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역시 당선 후에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중국의 위협적인 대외팽창 정책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6년에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 적성국이라고 명시했으며, 다음 달 기자회견담회에서도 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토론회에서도 일본에 대해 군사적 적대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국을 군사적 적국으로 지칭한 인물이 한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보고 있으니 평화헌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세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위협한 인식은 한일 갈등을 고조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통일외교를 표방하며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평화경제를 수립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문재인 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 또는 일부 감축하면서 대북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세계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입장이 일치합니다. 이 외교 노선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것입니다.

02

남북관계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방향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 상생경제든, 실용적 평화체제든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라면서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용적 남북 상생경제든, 실용적 평화체제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

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하노이 노딜’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 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하노이 노딜이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사건을 말합니다. 27일까지는 회담이 순조로운 듯 보였으나, 28일 오찬이 갑자기 취소되고 두 정상이 정상회담장을 떠나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 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밝히면서 “영변 핵 시설 폐기보다 더 많은 걸 없애야 한다”, “북한 측이 미국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자정 넘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민수경제와 관련된 부분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 항목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노딜 뉴스가 전파된 후,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양당 모두 노딜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미치 매키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쁜 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 회담장을 결

어 나가는 게 낫다”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 마디로 ‘배드딜(나쁜 합의)보다는 노딜(합의 결렬)이 더 낫다’는 말이었습니다. 훗날 트럼프와의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전 부통령 역시 “트럼프가 모든 외교를 부동산 거래처럼 하려 든다”면서 “이번에 외교의 중요성을 배웠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오토 웹비어 사건 때문에 미국의 대북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웹비어가 2015년 북한 여행 중에 억류되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가 2017년에 석방되어 혼수상태로 미국에 도착했으나, 6일 만에 사망한 충격적 사건을 말합니다. 2018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은 “웹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이 웹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빴다고 하더라도 공화당-민주당 양당이 하나같이 노딜을 반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양당의 공통된 생각이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일거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는 당연히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어떤 핵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생산된 핵 물질과 배치된 핵무기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비핵화가 진전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비핵화가 달성되었다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핵무기를 없애더라도, 그 뒤에서 새로 핵무기를 만든다면 비핵화가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기초적 사실 확인에서 시작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단계적 스케줄에 대한 대강의 합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 공화당-민주당 양당이 공유하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포괄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입니다.

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 핵 프로그램(핵시설, 핵물질, 핵무기)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전반적인 비핵화 일정에 대한 합의는 뻔 채로, 일단 얼마간의 핵 동결·감축과 얼마간의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북한식의 ‘수평적-동시적 협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의 협상은 오히려 북한의 핵(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주는 효과만 발휘할 것이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본다는 게, 하노이 노딜로 드러난 셈입니다.

요약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CVID와 북한이 제시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 상생경제든, 실용적 평화체제든 간에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을 인정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CVID와 북한이 제시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양립 가능하다는 주관적 희망에 따라, 미국과 북한에 서로 모순된 신호를 보내서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파탄을 낳은 케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무망한 일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어떤 이유로 ‘외교 참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정상회담 협상 결렬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1년 안에 비핵화하라고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합니다. 한 마디로 문 대통령이 북한의 “1년 내 비핵화 의사”를 보증한 셈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기초로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지만,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왜 북한의 최

근 태도가 지난달 당신이 김정은을 만난 이후 들려준 얘기와 다른 가”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에 전한 북한의 의사와 미국이 직접 북한과 접촉해서 들은 얘기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5월 26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연 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즉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말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 또는 아니오’라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열린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양국은 ‘비핵화’에 대한 간단한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7월 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빈 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 참사’에 문재인 정부가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측에는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 방식의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측에는 미국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즉, 수평적-동시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에 각각 서로 모순된 신호를 보내서, 결국 회담의 파탄을 낳고, 양국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받게 된 게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불턴 전 보좌관

이 문제인 대통령의 생각이 “조현병 환자 같다”는 극언을 했던 것은 이런 사실을 반영한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매가 양쪽에 모두 흰소리를 했다가 양쪽 모두에게 뺨을 맞은 격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하노이 노딜이란 결과를 되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자, 북한의 반응은 점점 더 격렬해졌는데요, 그 분노의 화살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 특히 문제인 대통령에게 돌려 집니다.

예를 들어, 문제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발표한 2019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경협, ‘평화경제’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 남북경협으로 내수시장이 커진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삶은 소대加里가 양천대소(하늘을 보며 크게 웃는다)할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020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 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돼 있다”며 재차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오그랑수는 “겉과 속이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나쁜 일을 꾸미거나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을 말합니다.

청와대는 불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정부 간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며 직접적으로 논평했는데요, 북한의 극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전후로 북한의 ‘막말’ 목록은 끝없이 이어지는데요(철면피, 특등 머저리, 떼떼 등), 민주당은 북한이 “대화를 더 과감하게 하자



2018년 10월 15일 한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는 이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참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또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데 평양에 대해 고무적 시그널이 있다면 외교 관계가 개선될 수 있냐는 질문에 “(프랑스는) 지난 2011년 평양에 인도적 문화적 교류를 위해 협력 사무실을 열었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평양과 외교 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다”며, “탄도 미사일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보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외교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불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다가 ‘외교 실패’라는 쓴맛을 보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림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며 이를 옹호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왜 북한은 하노이 노딜 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비난하는 것 일까요? 북한이 하는 비난, 극언을 들으면 어떤 일관성이 있는테요, 대체로 자기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문점이나 평양에서

무슨 말을 한 것이냐는 궁금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CVID와 북한이 제시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양립 가능하다는 극히 주관적 희망에 따라 어설픈 ‘한반도 운전자’ 외교를 하다가, 파탄을 겪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체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북한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04

이재명 후보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말한 만큼, 얼어붙은 남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낼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보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가까운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대한 조건부 제재완화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주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어기면 한국도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재명 후보라고 해도 그런 일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월 22일에 발표한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이재명은 합니다’를 살펴봅시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거에 일괄타결하는

빅딜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에서,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단계적 동시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말하는 CVID보다는 북한이 말하는 ‘수평적-동시적 협상’, 즉 ‘조선반도 비핵화’에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치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가 만능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비핵화 경로와 북한의 비핵화 경로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식 경로든, 북한식 경로든, 조건부 제재완화는 기본적으로 같고 가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하나마나한 소리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북한식 경로를 기본 옵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6년 11월, 《월간 조선》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북한을 경멸합니다. 자기들끼리 상속하고, 3대 세습하고,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추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병입니다. ‘종북몰이’는 엄벌해야 할 범죄행위고요.” 또한 “북한이 똥니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1 주적 아닙니까. 그 주적을 제가 추종한다면 국가 반



북한은 2020년 6월 8일에 열린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 회의에서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영정 제1부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때는 그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끊었는데,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신형 단거리미사일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곧 민족 절멸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역자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2016년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어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북한 체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가까운 입장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령 한국 정부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두둔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본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노이 노딜’이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면, 북한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 유엔결의안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북사업을 펼쳐야 할까요? 그래서 한국이 유엔제재를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즉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은 조건부 제재완화이니까 유엔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면 될까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국은 한반도 리스크의 관리자가 아니라 한반도 리스크의 진원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즉, 북한은 핵무기확산방지(NPT) 체제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유엔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위반하여 동시에 제재를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유엔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받는 중국조차도 유엔결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통일정책’에 담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니라, 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실용주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라는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한국이 ‘한반도 운전자’로 다시 등극할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은 신중한 검토 끝에 나온 대안이 아니라 극히 주관적 희망이거나,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니까 그냥 내지르는 허풍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위해 중국과 가깝게 지내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중국에 친화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국익을 우선하겠다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구하게 되면 중국공산당의 위험한 정치·경제적 행보를 지지하거나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남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외정책이 ‘국익 중심’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중국의 행보를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항상 정치적 협력을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대신 중국의 정치탄압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 전략을 지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공산당은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대신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으며, 국외에서 화교 자본의 중국 본토 유입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중국식 경제 성장 모델에서 나타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나 극심한 양극화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각종 사회적 불만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반대와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대외 팽창정책을 활용하고 있습

니다.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처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정부, 인민해방군, 공산당 모두에서 1인자의 위치에 올랐으며, 종신 집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를 위해 반부패 개혁을 빌미로 2017년까지 반대파를 포함한 140만 명의 당원을 숙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공산당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에도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의 언론과 학교에서는 서양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관련된 일곱 가지 주제와 관련된 보도나 토론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보편주의, 언론의 자유, 사법부 독립, 시민 사회, 시민의 권리,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오류, 정경유착입니다.

최근에는 탄압을 통해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홍콩노총을 해산케 하기도 했습니다. 캐롤 응 홍콩노총 전 위원장은 ‘국가전복 공모죄’ 혐의로 구속되고, 리첵안 사무총장은 ‘미허가 집회 주최 및 참여 선동’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에게도 ‘국가전복’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 위반 혐의가 종신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올해 초부터 최소 29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균형외교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살펴봅시다. 홍콩 탄압의 강력한 무기가 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논란이 될 당시, 중국은 양국 간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주겠다고 하면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정부는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원론



지난 30년간 홍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한국 및 세계 노동운동과 연대해 온 홍콩노총은 10월 3일 총회를 거쳐 결국 해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홍콩보안국 대변인은 조직은 해산했지만 국가 안보를 해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AFP)

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상당수의 국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의도적인 침묵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탄압행위를 지지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량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대만을 인정하는 국가에는 절대 원조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식 통치 방식과 친화적인 독재 국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2018년 기준으로 대외 원조 대상국 상위 10개 중 다섯 개가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식 감시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최근 공공서

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CCTV로 얻는 영상에서 안면인식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초정밀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미얀마, 베네수엘라, 이란입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100년의 국치'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강군몽'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팽창주의를 시사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토와 대만 사이의 바다인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한반도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위협한 군사 전략은 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외정책을 배우고 싶다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경제적 이권을 받는 대가로 중국의 주장을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 외교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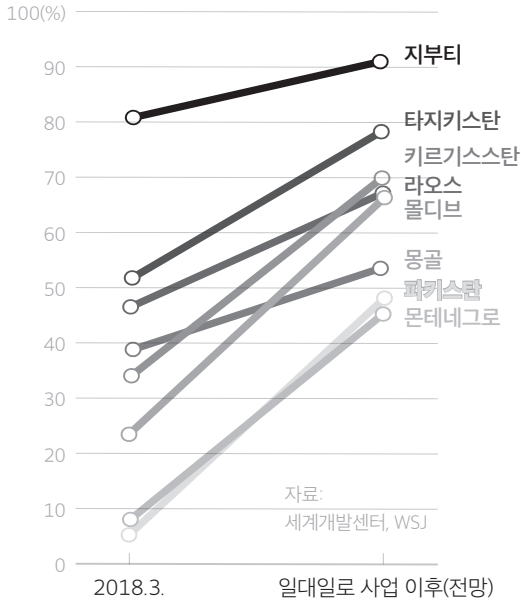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건 소탐대실로 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은 현재 첨단산업 진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려고 노력 중이고, 기술력을 따라잡으려 하는 핵심 목표 국가 중 하나가 남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인데, 국가가 나서서 기업에 보조금도 지불하고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도 도와주면서 중국기업, 특히 국유기업을 세

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시장 개방을 대가로 해외 기업들에 첨단기술 이전을 공공연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발전이 다른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중국은 국가 주도로 저임금, 환율 조작 정책을 펼치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제조업 공장을 빼앗아 왔고, 남미 국가들의 수출 물량도 빼앗아 왔습니다. 중국제조 2025가 현실화 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자본집약적 제조업 물량도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이 세계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중국은 20세기 초중반 미국이나 19세기 영국과 달리 혁신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발전엔 기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인 주식회사 제도를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이 모델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경제성장에 성공했으며, 세계 각국이 미국식 모델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경제성장 모델은 농촌의 대규모 잉여노동력에 대한 과잉착취와 혈연과 지연 관계 덕분에 중국에 친화적인 해외 화교 자본의 유입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따라 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낮은 국유기업에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이 막대한 양의 저리대출을 해주면서 기술이전도 시켜주는 모델 역시 중국공산당만이 실행할 수

일대일로 참가국의 전체 채무 중 중국채무 비율 변화



그래프의 국가는 대부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8년 기준 60%를 넘는 나라입니다. 이들 국가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전체 부채가 증가하는 동시에 부채 중 대중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있는 성장 전략입니다.

중국의 대외 팽창주의를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도와 해상경로 건설 계획인데, 길으로는 경로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공동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저개발국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항구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한 후, 빛을 대가로 장기간의 독점 사용권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일대일로는 경제적 프로젝트이자 동시에 군사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은 중국 국유기업이 수주받아 중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건설하므로 현지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기술력 및 경험 획득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건설하고 나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중국이 스리랑카에 건설하고 70%의 지분을 얻은 후 99년간 임대한 함반토타 항구는, 상업적 유용성은 거의 없지만 군사적 요충지라서 중국 함선들이 정박할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중국의 중화민족 우선주의와 대외 팽창주의는 아시아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리고, 저개발국을 빗더미에 앉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가 균형을 잡겠다고 중국에 친화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국익을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구하게 되면 중국공산당의 위협한 정치·경제적 행보를 지지하거나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남한마저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은 한국의 적성국가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타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든 말든 자신들의 인기만 유지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일본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본은 사이 좋게 지내야 할 우호국가라고 하지만,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 관련한 사안마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해야 할 말은 한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발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은 일본은 한국의 적성국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군사 부문에 국한한 말이며, 군사 부문에서만은 타당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선 일본이 군사적으로는 적성국가라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제대로 된 해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군사 부문에 국한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축소하려는 듯하지만, 사실 군사 부문에서 적성국가라고 하면 곧 무력충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이니깐요. 결국, 이 해명은 일본이 적성국이라는 말을 더욱 강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생각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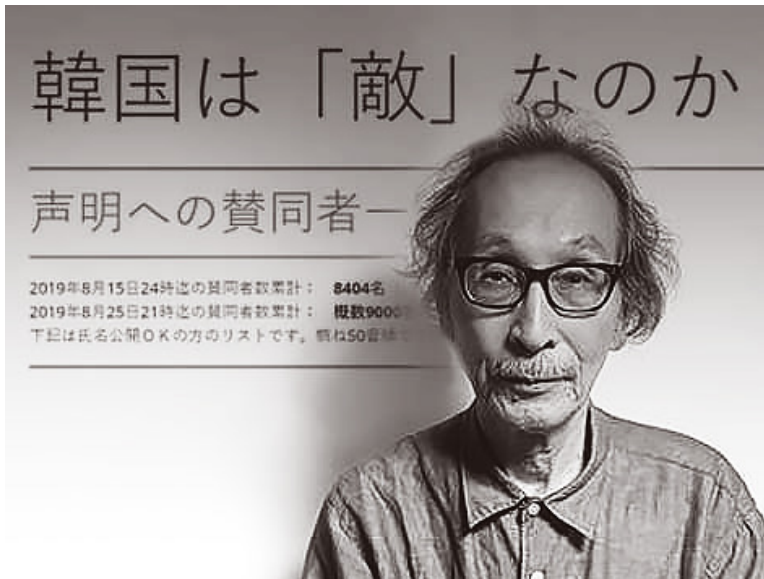
또, 이 후보의 발언은 항간에서 지적하듯이 상당한 외교적 결례

입니다. 국제외교에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예민한데, 대놓고 적이라고 지칭하다니요. 만약 반대로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한국에 대해 적성국가라 발언했다면 아마 전 국민적으로 사단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대일 강경 발언은 정부 간 관계를 악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도 가로막습니다. 반일 민족주의가 가장 크게 타올랐던 2019년을 떠올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여권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일 민족주의에 불을 붙였는데, 그 결과 한국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를 구매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정도로 일본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죠.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 내 일군의 지식인 사이에서는 “한국이 적입니까?”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일한청구권협정은 양국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사례로 2015년 체결된 ‘한일위안부합의’를 드는데, 그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을 일본이 인정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도 현재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함을 설득합니다.)

이렇듯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에도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흐름이 존재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는 못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반일의 불꽃 앞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7월 말, 와다 하루키 교수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 78명은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한국이 적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각국 민중이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흐름을 경계해야 함을 호소하는 한편, 양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은 당시 서명운동에 함께 했던 와다 하루키 교수와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던 홈페이지입니다. (사진출처: 《서울Pn》 2019.9.1.)

는 움직임이 힘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반일의 불꽃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라고 부채질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충격적이게도 2020년에 있던 4.15총선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친일/반일의 대결 구도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타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든 말든 자신들의 인기만 유지되면 된다, 즉 대외관계조차 그들의 집권이라는 사익에 종속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확히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성국가라는 더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일 민족주의 흐름을 조장하는 것이지요. 역시나 그 발언으로 거두고자 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인기입니다. 만약 이 후보의 말처럼 일본이 적성국가라고 가정하면, 일본 역시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이 되니 사이좋게 지내야 할 우호국가가 아니라 상호 적대국가라는 말이 더 맞겠지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의 정확히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미 그 효과를 검증한 바대로, 반일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조장해 인기를 얻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 역시 외교관계를 자신의 인기라는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군사적으로) 적성국가라고 간주하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그래서 앞서 말했듯 일본도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현재 일본 내에서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의 평화헌법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은 패전 후 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지난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의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아베 (헌법)9조 개헌반대”, “노 모어 히로시마”, “일본도 핵무기 금지조약에 참가하지”라는 선전물이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민중이 연대해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대일 강경발언은 이런 흐름에는 큰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에는 큰 힘을 실어 줍니다. 노동자운동은 이재명 후보와 같은 반일 민족주의와 단절하고 평화운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헌법은 일본만이 징벌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민중이 연대해 지켜나가야 할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한다. ②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9조, 즉 평화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극우세력은 이 헌법 조항을 개정하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반전평화를 지지하는 일본의 사회운동과 시민들은 이를 저지해왔고요. 그런데 바로 이웃국가가 적대국가가 된다면? 일본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흐름에 힘을 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평화헌법이 정말로 사라지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군비증강의 악순

환에 빠지게 될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이 과연 일본만이 지켜야 하는 징벌적인 조항에 머무르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일본헌법 제9조에 쓰여 있듯이 “국제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일본에만 징벌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일본과의 적대를 멈추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일본 민중들과 연대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 및 여당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조차 국내 정치적 인기 및 집권이라는 사익에 종속시킴으로써 외교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세력입니다.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이런 흐름과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흐름과 연대하여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및 그 정신을 공유하는 평화운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그 동안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비판해 왔는데, 중국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문제가 많지만,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그보다 더 끔찍할 것입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은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세계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심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비판하며 한미FTA 반대 투쟁 등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대안이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낮고 문제점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비난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패권적 야심이나 일부 금융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 각국 자본가들의 합의가 전제된 모델입니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주도해 구축한 현재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가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막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특허권이라는 규칙을 깨고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첨단기술을 빼내서 자국 기업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모든 특허권을 약화시키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빼낸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중국 기업의 지식과 기술은 철저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한 특허권에 대한 한시적 유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 기업의 백신 개발 기술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큼니다. 생산한 백신을 기부하거나 판매하고 있지만, 대개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이 인류의 공공재라고 말해놓고서 중국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기술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 속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이해관계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공산당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당이 없이는 신중국이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함 부흥도 없다”라는 발언이 이런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지금 우리는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살고 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이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세계 질서보다는 낫습니다.

자본가가 주도하는 지금의 세상이나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세

상이 비슷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오랜 기간의 계급투쟁 속에 조정되고 관리된 시스템입니다. 자유주의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나 사법부가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언론의 자유나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면 처벌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의 사례를 보면, 생산수단은 모두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이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제공합니다. 반면 중국 노동자들에게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양극화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0년대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상위 1%가 30~40%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상위 1%가 약 40%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중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공산당 간부들이라는 점입니다. 1억 위안 이상을 가진 가구의 91%가 공산당 간부 가족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새로운 대안질서를 만드는 것은 사회운동의 몫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과거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주도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포퓰리즘의 확산과 함께, 기존의 질서보다 더 나은 질서를 만드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급격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운동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노골적인 중화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군사적 팽창을 꾀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채와 부동산으로 연명하던 국유기업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두 축 중 하나인 빠른 경제성장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한 축인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큼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군은 아시아를 모두 떠나라고 경고해 왔으며, 시진핑 주석은 10월 9일 연설에서 대만을 반드시 흡수통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패권주의를 보이는 중국공산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친화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중국공산당의 횡포에 불만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탈’을 하고 있던 간에,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는 일종의 ‘배신 행위’로 간주됩니다.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이 축하인사에 대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중략)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 시장, 법치, 반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을 옹호하지 않고,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강제하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재명 후보의 대외정책은 결국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큼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 또는 일부 감축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건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에는 어렵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적성국으로 취급하는 비상식적인 반일감정 역시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관계를 개선하거나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는 건 잠깐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독을 집어먹는 꼴입니다. 중국 중심 세계질서는 대안도 차선도 아닌 최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운동은 한반도 비핵화와 반전평화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읽을거리

- * 김진영, 「미국과 중국, '전략적 경쟁'의 시대로」, 《계간사회진보연대》, 2020년 겨울호.
- * 김성균, 「동아시아,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겨울호.
- * 김진영, 「한반도 비핵화 전망, 평화의 기회는 다시 사라지는가?」,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겨울호.
- * 임필수, 「한일갈등의 배경, 전망, 쟁점, 대응방향」,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가을호.
- * 김진현,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미래」,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가을호.